

헌법 불합치 결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달라질까

북을, 순천·곡성 인구상한 초과 4곳은 미달... 2곳 줄어들 수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선거구 수가 2곳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농어촌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판결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어 구체적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중앙선관위는 이날 현재의 판결 결과에 따른 현 국회의원 선거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전체 246개 선거구 중 3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해 분구할 수 있고 25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다른 선거구와 통합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9월말 현재 총인구 수 5128만4774명을 선거구 248개로 나눠 나온 지역구별 평균 인구(20만8475명)를 기준으로 상한기준을 27만7966명, 하한 기준을 13만8984명으로 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한 곳의 선거구가 상한인구를 초과했지만 다른 한 곳의 선거구는 하한인구에 미달해 폐지·통

전국 62곳 재획정 불가피

경계 조정 획정 방법 다양

“농어촌 말살 결정” 반발

합될 상황이 됐다. 전남은 선거구 한 곳이 상한인구를 초과한 반면 선거구 3곳은 하한인구에 미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는 북구율이 인구 29만4355명으로 상한인구를 초과, 분구 가능성이 있지만 북구 전체인구는 44만8779명에서 경계 조정으로 현재 선거구 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광주 동구는 인구가 10만1656명으로 하한기준에 미달, 폐지·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에서는 순천·곡성이 인구 30만8182명으로 상한 기준을 초과, 분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수갑(12만5657명), 고흥·보성(11만5800명), 무안·신안(12만5488명)은 하한 기준에 미달했다. 이중 여수갑의 경우 여수 전체 인구가 29만534명으로 상한 기준을 넘기 때문에 경계 조정을 통해 현 선거구 2곳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광주에서 선거구 1곳, 전남에서 선거구 1곳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의 경우 16개 선거구가 상한 기준을 초과, 분구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 하한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다. 인천도 5곳의 선거구가 상한 기준을 초과, 분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경북은 한 곳의 선거구가 상한 기준을 초과했지만 하한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가 6개나 돼 대폭적인 선거구 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별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지치구·시·군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등 구체적 획정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하한 기준에 포함된 전남지역 선거구의 한 의원은 “현재의 이반 판결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을 말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하자” 文 “개헌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김무성·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여야대표 연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측의 메시지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되면서 대체로 치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의 정쟁, ‘식물 국회’를 회고하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는 자성으로 연설을 시작해 정치 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지었다.

김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위기 극복과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집약됐다. 김 대표는 70, 80년대 ‘복지’ ‘저성장 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의 고갈병에 시달리던 유입 국가들의 다양한 모델을 거론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 분담을 외면하는 나,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하느냐”며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화 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화 운동’을 전개하자며 여야의 정쟁중단 선언, 여야대표 회동 정례회를 제안했고,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 등도 정치 혁신 과제로 내놓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급 개혁 등 국정 여당들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곳곳에 담았다.

이를 반영하듯, 김 대표는 “자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최악의 시점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개헌론의 깃발을 올렸다. 문 위원장은 이를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오는 2016년 총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또한,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청정여야야언언(靑靑與野野言言)”론을 펴며 청와대와 여야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Table with 2 columns: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and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 Rows include: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복지, 공무원 연급개혁, 세월호. Each row lists key points from their speeches.

또한 집권 2년차의 박근혜정권의 현주소를 ‘민주주의 후퇴’와 ‘21세기 시대정신에 대한 공약 후퇴’ 등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언급한 ‘골든타임’ 표현을 개헌을 비롯해 경제, 남북관계 등에 적용해 시급성을 부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증불통 불통증 통(痛不通 不通痛·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구절을 인용, 박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주문기도 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의 여당은 야당 탓하는데 열중하고 반사익만 챙기려 한다. 야당이 실수하면 빌미잡아 달려들어 불합법질을 한다”고 비판하며 ‘등직한 만어사’와 같은 여당의 모습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내주까지 결론 내라”

국토부 “국회 예산 심의 압박” 최후통첩...광주시 시민의견 수렴 등 초비상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 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해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확보 등을 핑계로 11월 초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선시대 폐해 중 하나인 ‘일단 정부 예산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산절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되레 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지방 자치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광주시 도시철도 관계자를 불러 올해 확보한 국비 집행률 136억원대 국회 심의에서 삭감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는 광주시가 요구한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용역비 중 국비 52억원의 집행을 보류했으며, 지난해 1월 시작된 기본설계는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정을 70%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요청한 실시설계비 136억원도 광주시 입장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달 초부터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11월 초까지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실상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국민 세금 1조5053억원(국비 60%, 시비 40%)이 들어가는 도시

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건설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6기 들어 윤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수요 예측조사에서 우려했던 대로 교통 수요와 공사비용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노선과 건설방식 재조정 등을 통해 전체 공사비용의 최대 10%인 2000억원 안팎의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게 광주시의 의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견 수렴 일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도 도시철도 예산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London Stock Exchange, and various tour op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details.